

입법정책정보

-제20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I. 상위법령 제·개정	1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7
1.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2.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9
3.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12
4.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13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15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23

I 상위법령 제 ·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8호, 2024. 7. 30.,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 자격을 비수도권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고,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관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실증특례 적용 결과를 검토하여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236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고,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요청한 자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요청하도록 하는 등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재심의 요청절차 등을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법령 정비에 착수하려는 경우 정비 대상 법령의 내용, 법령 정비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법령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68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7. 30.>

제68조의2(국제협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3.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본조신설 2023. 12. 19.]

제69조(「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보유 비율은 10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내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도시형공장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가목의 산업육성구역 내에 건축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제조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제70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공장(물품을 입출고하는 곳의 상부로 한정한다)의 처마, 차양 등은 그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까지는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제71조(「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특례) 법 제10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산정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2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에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복합용지의 면적을 산업시설 용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하로 계획할 수 있다.

②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기업 대상 수요조사, 산업전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 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73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 제116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도등은 고압가스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정지·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4호, 2024. 7. 30., 일부개정]

□ 제정·개정이유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포괄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4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노후화된 주택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주거 지역에서 단독주택,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건축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법령에서 정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20퍼센트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32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법 제4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희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2.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4. 7. 30.]

제32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법 제40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도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4. 7. 30.]

제32조의5(입체복합구역의 지정) ① 법 제40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군계획시설의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5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입체복합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도시지역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도시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

2. 입체복합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이 경우 건폐율은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건축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체복합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이 경우 용적률은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한다.

4. 입체복합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가.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

나. 「건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본조신설 2024. 7. 30.]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2024. 8. 2.] [대전광역시조례 제6297호, 2024. 8. 2., 일부개정]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4조(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자문 등)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5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7.4.28.>

② 법 제1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4.28.>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재한 사람은 공청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 외에 시 및 자치구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3. 공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려는 사람은 의견을 공청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3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할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5.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및 공고·공람에 따른 주민의 의견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3장 도시기본계획

제6조(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4.28.>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중·장기계획과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중·장기계획등”이라 한다)의 기본이 된다.

제8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① 시장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각종 중·장기계획등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실적 등을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청회 등)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4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10조(주민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입안하는 기관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의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포함되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7.4.28., 2022.2.17.>

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7.8.11>

제11조(재공고·열람할 중요한 변경 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은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2.17.>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공고·공람하여야 할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개발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7.4.28.>

③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1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8. 7.] [부산광역시조례 제7368호, 2024. 8. 7., 제정]

□ 제정이유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는 등 경제의 구성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들이 경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함양하는 등 경제의 구성 주체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제교육”이란 생산, 소비, 분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
2. “경제교육단체”란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경제교육 학습체계”란 경제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4. “경제교육인력”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경제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회는 성별·나이·종교·학력·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고르게 주어져야 한다.
2. 경제교육은 시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경제교육은 공간과 장소를 넘어 모든 곳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
 2. 경제교육 학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민간차원의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및 지원방안
 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 강화 방안
 7. 경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경제교육인력 양성)

- 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경제교육단체가 공동으로 경제교육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 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교육 관련 전문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제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제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시행 2024. 8. 12.] [대구광역시조례 제6166호, 2024. 8. 12., 제정]

□ 제정이유

2014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제도 운영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만큼, 이를 개선하여 성인지 예산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성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실제 성별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서”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를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서”란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를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5. “지역성평등지수”란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평등지표를 통해 계산하는 지수화된 값을 말한다.

제3조(책무)

-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교육 등을 통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목표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확대 및 올바른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원칙)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차원에서 수립할 것
2.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는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수립할 것
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할 것
4.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제5조(운영계획 수립)

-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및 편성 방향
 2.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주민참여 및 홍보
 3.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공무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계획
 4. 성인지 예산 집행실적 등 분석·평가
 5.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기준
 6. 그 밖에 성인지 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추진사업
2.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3. 자치단체특화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분야사업
 - 나. 성별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 다. 사업 운영 전반에 성인지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

제7조(지침서 작성 등)

- 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성평등정책 기본 계획과 시행계획, 「대구광역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변경된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여성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8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분석·평가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에 응한다.

제10조(교육 및 컨설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 증진 및 제7조에 따른 지침서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 관계자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컨설팅 수행 및 컨설턴트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시민 참여) 대구광역시민은 누구나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 결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관리 체계 구축) 시장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별 성별수혜분석, 성과목표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 위탁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성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공로가 있거나, 성인지 예산제 운용을 통해 양성평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는 소속 기관(부서), 공무원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8. 12.] [충청남도조례 제5721호, 2024. 8. 12., 제정]

□ 제정이유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한 국내생활 적응, 나아가 도민과 외국인 주민이 서로 화합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도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생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강좌 운영 및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
2.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참여 지원
3. 체육활동 생활화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사항을 도 누리집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8. 12.] [충청남도조례 제5727호, 2024. 8. 12., 제정]

□ 제정이유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이·미용 시설을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이·미용 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미용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에 적용한다.

제4조(설치·운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이·미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지원
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료 등)

- ① 도지사는 이·미용 서비스의 시장가, 물가상승률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결정한다.
- ② 도지사는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미용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운영시간, 휴무일, 이용제한 사항 등을 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미용시설의 입장 및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하는 등 이·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다른 사람을 위협하게 하거나 이·미용 행위를 방해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 및 시설 이용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9조(위탁)

- ① 도지사는 이·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제9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도지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년도 이·미용시설 세부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미용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시간 및 정기휴무일
2. 이·미용시설 이용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미용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감독 등)

-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이·미용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4-0222 / 요청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의뢰안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수도법」 제7조의2 관련)

□ 주요내용

[질의요지]

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사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가 가능하다면) 자문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관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는바

(각주: 법제처 2022. 3. 25. 의견제시 22-0088 참조), 이 사안에서는 군수가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지역(이하 “공장설립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도법」 제9조에서는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공장설립제한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살피건대,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법」의 규정이 공장설립제한지역의 주민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각주: 법제처 2016. 12. 15. 의견제시 16-0323 참조), 이 사안의 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주민에 대하여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소득 보조 등을 통해 해당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공장설립제한지역의 주민에 대해 소득증대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는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황성군의 소관 사무인 공장설립제한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황성군수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의 형식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4. 6. 25. 의견제시 24-0195 참조).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인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구성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인 경우에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권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10. 18. 의견제시 18-0204 참조).

따라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자문기관인 이 사안의 자문위원회의 경우, 그 운영기준·방법에 관한 사항인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2. 27. 의견제시 19-0071 참조).

다만, 횡성군에는 이 사안의 자문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횡성군위원회조례”라 한다)가 있으므로, 이 사안의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조례에서 횡성군위원회조례와 달리 규정하여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자치법규 입안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4-0261 / 요청기관: 경기도 화성시]

□ 의뢰안건

화성시의 행정재산인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 주요내용

[질의요지]

가. 화성시의 행정재산인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화성시의 행정재산인 생활체육시설을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이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제1항), 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체육시설법 제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고,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생활체육시설은 화성시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공시설(「지방자치법」 제161조)에 해당하고, 공공시설인 화성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의 공공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8. 3. 6. 의견제시 18-0005; 법제처 2021. 6. 2. 의견제시 21-0147 참조).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사용료의 산정방법이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12. 28. 의견제시 16-0310; 법제처 2020. 8. 26. 의견제시 20-0189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체육시설법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생활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생활체육시설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제1호)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공유재산법이 적용되나, 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개별 법률의 규정이 적용될 것인바(공유재산법 제2조의2), 이 사안의 생활체육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인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용료의 감경에 관하여는 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의요지와 같은 감경 대상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7호의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안의 사용료 감경 대상인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지표는 문언상 ‘행사 또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입법연혁적으로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의2제7호 중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할 목적으로 2017년 12월 29일에 대통령령 제28521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행사’였던 부분에 ‘활동’이 추가된 것인 점, 같은 호는 사용료 감경의 필요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용료 감경의 대상을 넓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특정 생활체육시설 소재지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사용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22. 7. 6. 의견제시 22-0155 참조).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3.

[안건번호: 의견24-0179 /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 의뢰안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구로구의 행정재산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를 특정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 관련)

□ 주요내용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각주: 이 사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함.)에 따라 구로구의 행정재산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를 특정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각주: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하는데(공유재산법 제2조제1호),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됨(공유재산법 제5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계약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의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7. 8. 2. 의견제시 17-0185 참조).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공유재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의5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제1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이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단서는 행정재산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각주: 2014. 2. 19. 의안번호 1908036으로 제안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일반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의 수의계약은 그 계약상대자 외의 자에 대해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각주: 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19헌마871 전원재판부 결정례 참조), 수의계약 사유를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령’의 범위도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을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의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여타 법령에서도 공공형 실내놀이터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의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통해 의결하는 자치법규인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 법제처 2024. 4. 4. 회신 24-0018 해석례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한다 하더라도 공유재산법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의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각주: 법제처 2022. 6. 28. 의견제시 22-0184; 법제처 2022. 10. 19. 의견제시 22-0264 참조).

따라서, 구로구의 행정재산인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를 특정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안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아르헨티나, 「기본법」 승인

□ 주요내용

2024년 6월 28일 아르헨티나 하원은 일명 '옵니버스 법'의 개정안인 「아르헨티나의 자유를 위한 기본법」을 승인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추진한 이 법안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및 사회 모델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 법안에 대한 논의는 27일에 시작되어 13시간의 여정 끝에 찬성 147명, 반대 10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다.

「기본법」 초안과 재정 개혁안은 밀레이가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12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두 법안은 4월 30일 하원에서 승인되었다. 그러나 상원에 상정된 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6월 12일 상원에서 최종승인 된 후 6월 27일 하원에서 최종 승인되었다. 이러한 6개월의 여정 끝에 아르헨티나 「기본법」은 7월 8일(월) 아르헨티나 연방 관보에 게재되었다.

밀레이 대통령의 「기본법」은 민간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산업 및 상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가 개입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승인된 이 법은 공공 행정, 사법, 내무, 환경 및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조치와 개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국가 개혁 △고용 촉진 △노동 현대화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을 포함하는 23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위 분야에 비상사태 선포를 선포하고 대통령은 1년 동안 특별 입법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또한 소득세 환원 등 세제 개혁 패키지의 일부도 「기본법」과 함께 승인되었다. 이 법안에는 공공 지출을 국내총생산의 약 25%에 달하는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본법」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및 사회 전반의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아르헨티나, 「기본법」 승인”, 공공누리 제1유형, 2024. 8. 2.